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공동체자유주의와 언론의 자유
발제자: 홍성기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
일 시: 2017년 05월 25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제 256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약 >

☞ 05월 25일 정책세미나에서는 홍성기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를 연사로 '공동체자유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는 불일불이(不一不異)의 관계를 갖는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존재론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리불가능성에서 출발하는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이다.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과 집단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틀(Frame)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통합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합적 개념으로 성립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개인의 존재근거인 공동체를 직·간접적으로 파괴하는 자유는 제한된다. 평등한 대화를 통해 시민적 자유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내에서는 수많은 불평등하거나 비대칭적인 대화 상황이 벌어진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 검찰의 기소권 혹은 판사의 결정 등 대화 상대와 목적에 따라 비대칭적인 대화가 필요한 순간도 많다. 비대칭성이 강할수록 권력 집중이 증대될 수 있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권력분립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이나 권력분립의 훼손은 권력집중을 유발하여 절대주의나 전체주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언론의 자유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언론은 사실 보도와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비대칭적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언론은 사실에 대한 해석 혹은 가치 판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므로 특정 이념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언론도 비대칭적 대화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권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언론은 스스로 언론 윤리를 통해 스스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크라시(Mediacracy)란 언론이 막대한 힘을 갖고 사회를 지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언론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론 지배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가 권력기관 혹은 정당과 같은 사회핵심단체들과 묵시적으로 연대한다면 시민적 자유를 합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

■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짜 뉴스는 풍자나 패러디와는 구분된다. SNS를 적극 활용하는 ‘1인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하는 시대이다.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들은 거짓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수백만 명의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보다는 언론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 언론의 자유는 직접 개입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뿐더러 세계화와 정보자유화 시대에서 이런 행태는 불가능하다. 비정파적 ‘사실 확인 단체’를 설립하여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SNS상의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1인 언론’시대에서 국민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한다. 이 정부가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각 언론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인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허위보도를 많이 한 언론 순위를 발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이다. 개인, 단체, 언론, 정당, 정부기관 등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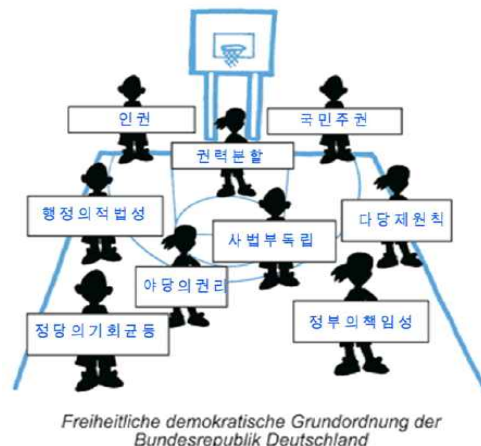
■ 공동체자유주의의 본질과 시민적 자유의 핵심

: 공동체는 개인의 존재근거이며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최대로 보장해야 한다.

-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는 불일불이(不一不異)의 관계로 조화롭게 영위해야 한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존재론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리불가능성에서 출발하는 정치체계(Political System)이다. 특정 집단이 추구하는 정치이념(Political Ideology)이 아니다. 서로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과 집단이 자유롭게 공존할 수 있는 틀(Frame)이다. 공동체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통합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정합적 개념으로 성립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공동체자유주의이다. 개인의 시민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개인의 존재근거인 공동체를 직·간접적으로 파괴하는 자유는 제한된다.
- 개인의 자유는 관계적 측면이 강하게 존재한다. 불이익을 받거나 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로빈슨 크루소에게 자유나 권리는 무의미하다. 또 다른 예로 인터넷 상에서 익명이 보장되어 누가 어떤 말을 하는 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이는 무정부(Anarchy) 상태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내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써 자유'란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공동체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공동체자유주의의 근거가 된다. '양도'란 경제적 표현으로 자유를 개인의 소유물로 오해할 수 있다. 국가로부터 침해받았던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가 확립되었다. 특정인 혹은 집단의 절대적 권리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공동체 유지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 민주주의(民主主義)의 핵심은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 있으며, 의사결정수단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도입'하는 데에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시민적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체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도입하였다. 다수결로도 침해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로 설정했다. 유럽 정치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정파적 관점에서 사용하지 않으며 공동의 체제로 인정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나타나듯이 독일은 특정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력분립(權力分立)을 통해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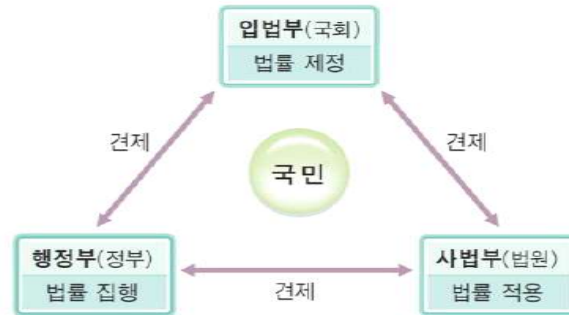


[그림 1]

독일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시민적 자유의 핵심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근원이 훼손되는 것과 같다.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평등한 대화를 통해 사상의 자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타인 혹은 타집단과의 대화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표출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한 대화 상황'으로 본다. 시민적 자유를 이해할 때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 혹은 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 평등한 대화를 통해 시민적 자유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공동체 내에서는 수많은 불평등이나 비대칭적인 대화 상황이 벌어진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대화, 검찰의 기소권 혹은 판사의 결정 등 대화 상대와 목적에 따라 비대칭적인 대화가 필요한 순간도 많다. 비대칭성이 강할수록 권력 집중이 증대될 수 있다. 국가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권력분립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이

나 권력분립의 훼손은 권력집중을 유발하여 절대주의나 전체주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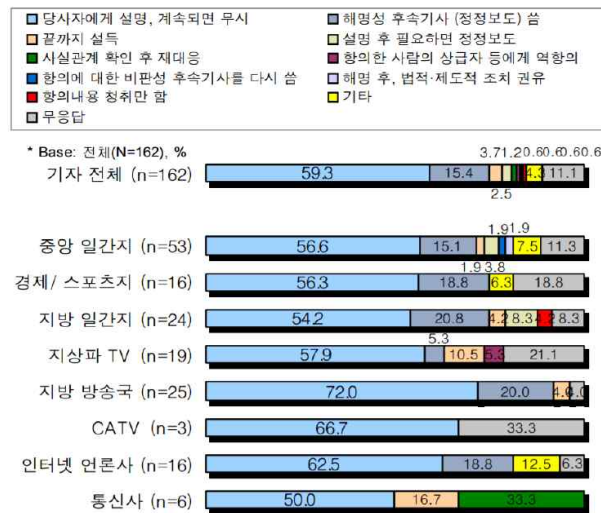
[그림 2]

권력분립은 국가에 의한 시민적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공동체 설계방식이다.

■ 언론의 자유와 여론 지배 가능성

: 언론은 비대칭적 대화이며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언론의 자유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언론은 사실 보도와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비대칭적 대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언론은 사실에 대한 해석 혹은 가치 판단을 국민에게 제공하므로 특정 이념의 실현을 추구할 수 있다. 언론도 비대칭적 대화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권력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권력이 증대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언론은 스스로 언론 윤리를 통해 스스로 견제할 필요가 있다. 왜곡과 편파보도 항의에 대한 해외 언론 대응방식을 보아도 언론이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왜곡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직위가 박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언론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고자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며, 언론기관의 윤리 강령을 지키고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도 있다. 『한국 언론윤리 현황과 과제』에 의하면 한국 언론 윤리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한다. 기자들이 제대로 윤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을뿐더러 소속 언론사의 언론윤리강령에 대한 인지도도 낮기 때문이다. 범죄 현장에서 특정인이 ‘범인일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신원을 공개하는 등의 행태가 빈번히 나타나며, 한국 언론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언론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크라시(Mediacracy)란 언론이 막대한 힘을 갖고 사회를 지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언론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의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론 지배 가능성이 상존한다. 국가권력기관 혹은 정당과 같은 사회핵심단체들과 묵시적으로 연대한다면 시민적 자유를 합법적으로 억압할 수 있다.
- 2008년 한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를 미디어크라시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광우병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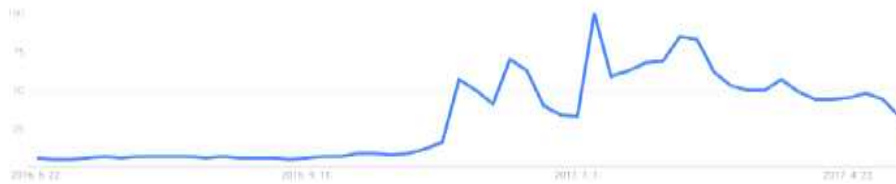
왜곡, 편파보도 항의에 대한 언론의 대응방식 (출처: 남재일 외, 『한국 언론윤리 현황과 과제』, p.121)

사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협상의 선결조건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부 정당, 언론, 지식인과 시민단체가 한미 FTA 정책 반대 운동을 펼쳐나갔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되먹임(Feedback) 구조가 형성되었다.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판단에 대한 전문성과 공적 권리를 갖는 식약청 대신 국민 건강권을 강조하는 사적 권리를 더 신뢰하였다. 국민의 80%가 쇠고기의 위험성을 확신하였으며 일종의 폭발적인 언론·여론의 광기가 보이기도 하였다. 공적 권위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실 판단을 담당하고, 언론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다.

■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한 Post-Truth Politics 시대

: 언론 윤리가 시민 윤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 주류 언론에서 범람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짜 뉴스는 풍자나 패러디와는 구분된다. SNS를 적극 활용하는 '1인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하는 시대이다.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가짜뉴스들은 거짓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수백만 명의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자료 [그림 4]에 의하면 2016년 영국 Brexit 국민투표, 미국 대통령 선거와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 관련 가짜 뉴스가 대량 유통되었다.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폴리티팩트(POLITIFACT)와 같은 사실 확인(Fact-Checking) 웹사이트가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 2016년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Post-Truth Politics 시대는



[그림 4]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 동안 급속도로 가짜뉴스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사실확인(Fact-Checking) 웹사이트 폴리티팩트 (POLITIFACT)의 한 페이지.

데이터가 관건이다. 시시각각 바뀌는 국민의 정서와 의견에 대한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이 정치가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Post-Truth Politics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국 대부분 언론이 거짓·왜곡보도의 당사자인 동시에 비판자다.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에게는 사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도 좋은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가짜뉴스가 유권자들의 감정을 잡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도 하였다. 이미 진영화(陣營化)된 정치지형에서는 정보 왜곡, 세뇌와 정파적 내러티브가 만연하고 있다. 진실추구도 거짓보도를 밝히는 데 국한된다. 언론이 특정 이념 혹은 권력 추구 집단과 묵시적 연대를 강화할수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권력분립이 훼손되고 ‘언론사 내부 언론의 자유’마저 억압될 수 있다.

- 언론이 공정성을 잃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보다는 언론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 정치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은 “미국 언론이 정파성을 띄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였다. 언론이 특정 정파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권력과 연대하거나 권력 창출과정으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1인 언론이 보편화되는 시대에서 언론 윤리는 모든 시민의 윤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Thomas Jefferson (1772 - 1782)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의 하나를 택하라면, 주저 없이 후자를 선택하겠다.”

“이것(언론의 타락)은 상당 부분 정파성에 의한 폭력과 악의에 의해 발생한다.”

[그림 6]

미국 3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은 정파성에 의한 언론의 타락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 언론의 자유는 직접 개입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뿐더러 세계화와 정보자유화 시대에서 제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정파적 사실 확인 단체를 설립하여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SNS상의 가짜뉴스에 대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과 거짓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1인 언론’시대 국민의 핵심 역량이 되어야 한다. 이 정부가 이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각 언론 신뢰성에 대한 평가와 인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허위보도를 많이 한 언론 순위를 발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공동체자유주의의 근간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에 대한 책무성이다. 개인, 단체, 언론, 정당, 정부기관 등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제 256회 정책세미나 질의응답

질문1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허위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식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어떤 측면에서 이 이슈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답변 최종 판단은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 4대강 이슈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공공기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제기까지 답변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내린 판단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공적기관이 ‘권

위와 국민의 신뢰'를 잃었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먼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실보도는 수렴되고 허위보도는 가지를 쳐낼 수 있다.

질문2 최근 한국 사회가 겪는 혼란을 보았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최선의 이념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답변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이 아니라 정치체제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부작용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의 자체도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갖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질문3 사실보다 감정이 중요한 시대에 규제가 없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은가? 이 혼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답변 정부는 법 또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규제한다.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특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차별성 발언(Hate Speech)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특정 발언이 존재한다면 규제가 만들어 질 수 있지만, 그 특정 발언이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 수많은 인터넷 속 발언을 정부가 파헤치기엔 장치도 인력도 부족하다. 대응 단체를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